

법률서비스보험 활성화 방안 토론회 자료집

주제발표

# 법률서비스보험 활성화 방안

박기억 변호사 (대한변협 법률서비스보험특별위원회 위원)

# 법률서비스보험 활성화 방안

박기억 변호사 (대한변협 법률서비스보험특별위원회 위원)

## I. 서론

### 1. 법률서비스보험에 대한 이해

-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변호사비용이나 인지대, 감정비용 등의 비용이 필요한데, 이러한 비용을 보험회사가 보장해 주는 보험이 바로 법률서비스보험 내지 권리보호보험이라 한다.<sup>1)</sup>
- 이러한 보험의 명칭은 나라마다 다른데, 다음과 같다.
  - 〈독일〉 권리보호보험(Rechtsschutzversicherung),<sup>2)</sup>
    - ※ Recht(권리)=Right/ Schutz(보호)/ Versicherung(보험)
  - 〈미국〉 법률서비스보험(Legal Services Insurance, Insurance for Legal Service, Prepaid Legal Services), 법무비용보험(Legal Expenses Insurance, Legal Protection Insurance, Legal Cost Insurance). 주에 따라 다르다.
  - 〈일본〉 권리보호보험(權利保護保險), 변호사보험(弁護士保險) - 일변련은 당초 사용하던 명칭인 ‘권리보호보험’이 익숙해지기 어렵다는 이유로 ‘변호사보험’이라고 부르기로 하였다고 함.<sup>3)</sup> 그러나 일반적으로 권리보호보험이라고 부르고 변호사보험을 이에 병기하는 경우가 있음.
- 명칭을 둘러싼 논란 : ‘법률서비스보험’이라는 용어가 생소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래서 독일과 같이 권리보호보험이나 일본처럼 권리보호보험 또는 변호사보험이라고 부르자고 하거나 소송비용보험이라고 칭하자는 견해가 그것이다.
-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보험은 의료보험, 법률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보험은 법률서비스보험 : 법률서비스보험이란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보험이다. 질병에 걸리거나 다쳤을 경우 의사로부터 치료라고 하는 의료서비스를 받는 비용(치료비)을 보험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의료보험 내지 건강보험이라면, 법적 분쟁이 생겨서 법률전문가(변호사)로부터 상담이나 소송수행 등 법률서비스를 받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험 처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법률서비스보험이라고 칭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1) 최준선, “권리보호보험 연구”, 기업환경의 변화와 상사법(손주찬교수 고회기념논문집)(1993), 781., 장재옥, “법률서비스보험 연구 -독일에서의 권리보호보험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22권 제1호(1997),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160.  
 2) 이에 대하여 권리보호보험은 소송비용보험이기 때문에 이를 권리보호보험이 아닌 ‘소송비용보험’(Prozesskostenversicherung)이라고 해야 한다는 주장에 제기되기도 한다고 함(최준선, 앞의 논문, 783, 각주4) 참조).  
 3) 秋山清人, 辯護士保險(權利保護保險)搖籃期, 權利實效化のための法政策と司法改革 : 小島武司先生古稀祝賀(續) (2009), 4.

- 대한변협 법률서비스보험 도입연구 TF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이러한 보험상품을 ‘법률서비스보험’이라 칭하기로 용어를 정리한 바 있는데, 이를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보험에 대한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변호사보험, 법률비용보험, 권리보호보험 등으로 불리도 무방해 보임.
- 법률서비스보험은 하나의 사회보장제도 : 법률서비스보험은 의료보험과 마찬가지로 사회보장제도이다. 소송비용이 없어서 법원의 문을 두드리지 못하는 것은 의료비가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임.<sup>4)</sup> 법률서비스보험은 바로 이와 같은 소송비용을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임.

## 2. 논의의 범위

- 이번 토론회 주제는 법률서비스보험 활성화 방안인바, 위 보험이 활성화된 이후에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토론회라기보다는 위 보험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위 보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점에 주안점을 두었고, 이에 따라 위 보험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나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추후의 기회에 하기로 함.
- 법률서비스보험 활성화 방안을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률서비스보험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법률서비스보험이 변호사배상책임보험과 어떻게 다른지 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겠고, 나아가 법률서비스보험이 어떤 경위로 생겨나게 되었고, 각국에서는 위 제도를 어떻게 도입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언제 어떻게 도입되었고, 보급 및 운영현황은 어떠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음.

## II. 변호사배상책임보험과의 구별 및 그 한계

### 1. 법률서비스보험은 변호사배상책임보험과는 다르다.

- 흔히 법률보험 내지 법률보험서비스보험이 변호사가 직무수행 중 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음. 의사의 의료과실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은 전문직(의사)배상책임보험이지, 의료보험이나 건강보험이 아님. 마찬가지로 일반인이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에 법률서비스를 제공받는데 필요한 비용을 담보하는 것은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이 아니라 바로 법률서비스보험임.
-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은 배상책임보험의 일종으로,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질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

4) 최준선, 법무비용보험제도의 도입의 필요성, 보험조사월보 제18권 10호(1995), 보험감독원, 8.

계약임(상법 제719조).

- 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적 청구권을 규정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 경우 보험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채무는 가해자의 피해자에게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봄(병존적 채무인수).<sup>5)</sup>
- 따라서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직접 부담해 주는 것이지 절차적 비용을 부담해 주는 법률서비스보험과는 다르다. 법률서비스보험은 배상책임을 이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변호사 비용 등 절차비용을 담보해 주는 것에 불과함.

## 2. 책임보험에서 방어비용으로 인정되는 변호사 비용과의 구별

- 다만, 상법은 책임보험에서 보험회사가 방어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제720조 제1항)을 두고 있는바, 그 한도에서 책임보험이 법률서비스보험의 기능을 부수적으로 일부 수행하고 있을 것임.
- 상법 제720조 제1항(보험편 ‘책임보험’ 절)은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을 방어비용으로서 보험회사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상법 제720조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의 부담)

- ①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다27076 판결]

상법 제72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방어비용'은 피해자가 보험사고로 인적, 물적 손해를 입고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경우에 그 방어를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아직 손해배상 청구가 없는 경우 방어비용이 인정될 여지가 없지만, 피해자가 반드시 재판상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방어비용이 인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보험자에게 재판상 청구는 물론 재판 외의 청구조차 하지 않은 이상, 제3자를 상대로 제소하였다 하여 그 소송의 변호사 비용이 상법 제720조 소정의 방어비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 책임보험에서 인정되는 방어비용은 엄밀히 말하면,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수(병존적 채무인수)하게 된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을 방어하기 위하여 변호사 비용 등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가해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측면이 강함.

5) 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82793 판결 등 참조



### 3. 배상책임보험에서 인정되는 방어비용의 한계

- **가해자에게만 적용** : 방어비용은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가해자에게만 적용될 뿐 피해자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 **배상금액이 보험가입금액 범위를 초과하면 방어비용 인정은 무의미** : 방어비용에 있어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하므로, 배상책임이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를 넘게 되면 실질적으로 방어비용은 보장받기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음.
  - 배상책임범위가 무한대인 경우(예컨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대인배상책임이 무한대인 경우)에는 방어비용부담에도 별 문제가 없으나, 대부분의 배상책임보험은 보험가입금액을 일정 금액으로 정해 놓고 그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과 방어비용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방어비용까지 보장받기는 어려움. 예컨대,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이 1,000만 원인 경우, 배상할 손해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방어비용을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배상책임조차 전부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피보험자가 추가로 부담할 배상액만 늘어나는 결과가 될 것임.
  - 만약 방어비용인 변호사 비용도 보험가입금액에 포함시켜서 방어비용을 보장받게 되면 추가로 배상할 금액만 늘어나는 것이므로 방어비용을 보장하는 실익이 없고, 따라서 책임보험에 부가된 방어비용으로는 변호사 비용을 보장받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결론적으로 방어비용은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만 인정되므로 배상범위가 보험가입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방어비용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보험회사에게 배상책임이 없는 사고(면책조항에 해당하는 사고나 담보에서 제외된 사고)에 대해서는 방어비용을 보장할 수 없는 한계** : 책임보험에는 면책조항(보상하지 않는 손해)을 많이 두고 있는데,<sup>6)</sup> 방어비용은 원칙적으로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보험사고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어 보험자에게 배상책임이 없는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자로서는 자신의 책임 제외 또는 면책 주장만으로 피해자로부터의 배상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은 보험자와는 무관한 자기 자신의 방어를 위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비용까지 보험급여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여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 판례임(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2106 판결). 따라서 책임보험에서 가해자에게 인정되는 방어비용은 보험회사에게 배상책임이 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를 보장받을 수 없거나<sup>7)</sup> 보장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한계가 있음.
- 위와 같이 법률서비스보험은 가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되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및 그 한도가 얼마인지와는 무관하게 그와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책임보험회사가 면책되는 사고까지도 폭넓게 보장된다는 점에서 방어비용으로 인정되는 변호사 비용과는 다르다는 점이 특징임.

6)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보험'은 면책조항이 16개 항목이 있음.

7) 다만, 사고발생시 피보험자 및 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을 지출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방어비용은 바로 보험자의 배상책임도 아울러 면할 목적의 방어활동의 일환으로 지출한 방어비용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의 방어비용은 당연히 위 법조항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이 때의 방어비용은 현실적으로 이를 지출한 경우뿐만 아니라 지출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상법 제720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그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함(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2106 판결).

### III. 각국에서의 법률서비스보험의 탄생 및 발전과정

법률서비스보험이 각국에서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 발전하게 되었는지를 알면 이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법률서비스보험이 운영되는 나라는 많지만 대표적으로 독일, 미국, 일본을 살펴보기로 함.

#### 1. 독일<sup>8)</sup>

- 법률서비스보험이 최초로 도입된 것은 1917년으로 당시 프랑스 도시인 르망(LeMans) 자동차 경주대회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피해자가 경주대회 주최 측과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있어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위 보험이 출현하였다고 함.
- 이후 1928년 스위스 다스(DAS : Deutscher Automobil Schutz AG)사가 자회사 설립방식으로 독일에 진출하였는데(1988년 이후 독일 보험사인 ERGO의 자회사로 편입됨), 초창기에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자동차사고에 따른 형사소송에서의 방어비용, 변호사보수, 감정서작성비용 등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소송비용을 담보하였으나,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전후 복구와 경제부흥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따라 담보범위가 다른 범위로 확대되었다고 한다.
- 독일의 경우 보험계약건수는 1,969만 건으로 가구당 가입률은 43%에 이르고,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46개사에 이른다고 함.
- 독일보험협회는 법률전문가가 아니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항형식으로 작성된 표준약관을 개발하여 1994년 3월 1일부터 회원사들에게 그 사용을 권하고 있고, 2010년 9월부터 적용되는 표준약관이 공표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 현재 독일보험계약법 제125조에서 제129조에 법무비용보험에 대한 명문규정을 둬.

#### 2. 미국<sup>9)</sup>

- 미국에서는 1899년 의사변호회사(Physicians' Defense Company)가 의료과오소송에서 가입자에게 제공한 법률서비스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음.
- 단체법률서비스의 시작은 1919년 경찰관 상조회에서 회원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최초라 함.
- 이어서 열차승무원상조회나 연합탄광노조가 1930년대부터 작업중단이나 노동재해와 같은 업무

8) 최준선, 권리보호보험연구, 기업환경의 변화와 상사법(순주찬교수 고회기념논문집), 1993, 785~786., 권영수, 법률비용보험의 운영현황 및 활성화에 따라 예상되는 위험에 대한 대책, 조사연구 Review 제19호, 금융감독원, 2005, 8~12., 권효상, 법무보험에 관한 연구-법제운용과 정착가능성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2), 31-33. 등 참조

9) 장재옥, “미국에서의 소송비용분담과 법률서비스보험”, 법학논문집, Vol.23 No.2(1999), 중앙대학교 법학연구, 76-79., 권영수, “법률비용보험의 운영현황 및 활성화에 따라 예상되는 위험에 대한 대책”, 조사연구 Review 제19호(2005), 금융감독원, 8-12., 이봉림, “법률비용보험의 국내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Vol.20 No.2(2008), 111-112., 권효상, “법무보험에 관한 연구-법제운용과 정착가능성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2), 36-38. 등 참조

상의 문제를 법률서비스의 직접적인 문제로 하였다고 함.

- 한편, 호텔근로자들이 1964년 뉴욕에서 광범위한 법적 서비스를 목적으로 한 자체적 Clinic Plan을 마련하였는데, 뉴욕주 변호사회가 1965년 이러한 법적 서비스를 변호사 직역침해라고 하여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중단되기도 함.
- 그런데, 연방대법원은 모든 미국인은 법률서비스를 받고 그러한 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 노조나 소비자단체 등에 가입할 헌법상의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마침내 1971년 “United Transportation Union v. State Bar of Michigan”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법원에의 실질적인 접근(meaningful access to the courts)을 위하여 근로자는 연방헌법 제 1조에 따라 단체를 통하여 변호사선임비용을 확보할 기본권을 가진다”고 판시하기에 이룸. 그 후 법률서비스보험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함.
- 미국 변호사회(American Bar Association : ABA)는 1970년에 “선급법률서비스보험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두고 실험적으로 시행한 법률서비스플랜을 감독하였고, 1972년에는 모든 주 및 지방변호사회가 선급법률서비스에 관한 연구와 실험을 행할 것을 공식적으로 권유하였으며, 1975년에 미국 선급법률서비스협회(American Prepaid Legal Services Institute : API)를 설립하여 조사와 연구기능을 맡겼다고 함.
- 1976년에는 연방세법이 개정되어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한 선급법률서비스에 출연한 금액이 면세대상에 포함되게 됨에 따라 근로자가 단체교섭을 통해 사용자측에 선급법률서비스를 복리후생의 하나의 방편으로서 부가적 후원급여로 제공하도록 쉽게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 2008년 6월에는 미국주법무장관회(the U.S. National Association of Attorneys General)와 미국변호사회(ABA)가 선급법률플랜(Prepaid Legal Plan)에 대한 지원을 결의하면서 선급법률서비스를 지지한다는 점을 밝히는 등 법률서비스보험 확산에 앞장서고 있음.
- 미국에서는 2002년 말 기준 전체 인구의 약 40%인 1억 2,200만 명이 법률서비스보험 1개 이상에 가입하고 있다고.

### 3. 일본<sup>10)</sup>

- 일변회, 법무보험제도 연구 시작 (1979) : 일본변호사협회(일변회)는 1979년부터 법무보험제도를 연구하기 시작하였으나 시기상조론으로 연구가 중단되었다가 1989년부터 다시 연구를 시작함.
- 법률상담보험 골자안 마련하고 연구회 시작 : 1993. 1. 아베 사부로(阿部三郎) 일변련 회장 시절에 가칭 법률상담보험의 골자안이 승인되었고, 그 후 변호사업무대책위원회의 프로젝트 팀(PT)에서는 각 보험 회사를 불러들여 변호사보험 실현을 위한 연구회를 시작.
- 변호사보험 상품 최초 발매 (2000년) : 그 연구회의 멤버인 보험회사에 의해 변호사보험 상품이 발매된 것이 2000년임.
- 일변련의 변호사보험(권리보호보험)제도 발족(2000. 10. 1.) : 일변련은 2000년 6월에 권리보

10) 佐瀬 正俊, “權利保護保險の歴史とその將來像”, 權利保護保險の課題と今後の展望, 自由と正義 64卷 7號(2013. 7.), 10~11., 秋山清人, “辯護士保險(權利保護保險)搖籃期”, 權利實效化のための法政策と司法改革 : 小島武司先生古稀祝賀〈續〉(2009), 4.

호보험의 창설에 협력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같은 해 7월 그 보험을 판매하기로 정한 보험회사와 변호사 소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 2000. 10. 1. 일변련의 변호사보험(권리보호보험)제도가 발족하게 되었는데, 발족 당시 참가한 보험회사는 2개사이고, 그 보험회사와의 협정에 의해 전국에서 변호사를 소개하기 시작.

- 일변련은 2000. 6. ‘권리보호보험’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출원하여 다음해인 2001. 10.에 등록이 확정된 상표라고 함.<sup>11)</sup>
- 일변련 Legal Access Center(일변련 LAC) 설립 : 이어서 보험회사와의 협정의 운용을 소관하고 보험의 추진을 검토할 위원회로서 일변련 Legal Access Center(일변련 LAC)가 종전 연구회를 주도해 온 변호사업무대책위원회와는 별개로 설립됨.
- 2012년까지 공제협동조합을 포함하여 협정회사는 11개사가 되고, 취급건수도 2012년도에는 연간 약 18,000건을 넘게 되었고, 2011년도 유료상담이 전국 변호사회에서 약 10만 건이라고 함.
- 보험의 대상분야는 대부분 교통사고에 있어서 손해배상에 관한 변호사비용·재판비용이지만, 일상가사의 손해배상청구도 포함된 보험도 있다고 함.
- 보험은 대부분 상해보험·화재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설계되어 있으며, 법률상담료를 10만 엔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사건의뢰 시 변호사 보수 및 소송비용을 100만 엔~500만 엔으로 차등화하여 지급한다고 함.

#### 4. 한국

- 2008. 9. 26. D.A.S. 법률비용보험(주)<sup>12)</sup>가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업 예비허가를 받음<sup>13)</sup>
- 2008. 11. 12. D.A.S. 법률비용보험(주)의 질의(법률비용보험업의 변호사법위반 여부)에 대한 대한변협의 회신 : 변호사법 위반 아니다.

#### [법률비용보험업의 변호사법위반 여부에 대한 회신(대한변협 2008. 11. 12.)]

보험계약(보험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의 경우 부담하게 되는 법률비용의 부담을 덜고자 미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고, 보험회사는 대수의 법칙에 의해 산출한 보험료를 지급받은 뒤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약정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동의를 받거나 또는 동의 없이 자신이 변호사와 수임계약을 체결하게 되지만, 어느 경우이든지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납부하는 보험료가 변호사 소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변호사에게 지급되는 변호사 선임료도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지만, 변호사는 어디까지나 법률사무 수행의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지 보험회사와 나누어 가지는 구조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보험사업자가 위와 같은 내용의 보험사업을 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34조에 해당하지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

11) 佐瀬 正俊, “権利保護保険の歴史とその将来像”, 権利保護保険の課題と今後の展望, 自由と正義 64巻 7號(2013. 7.), 日本弁護士連合会, 7. 각주7) 참조.

12) D.A.S.법률비용보험(주)은 Munich Re 보험그룹(獨)에 속한 독일의 법률비용보험사인 D.A.S.AG에서 78.3%를 출자하여 설립하는 것이라 함(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가칭) D.A.S. 법률비용보험(주)의 보험업 예비허가”,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손해보험서비스국(2008. 9. 26.), 1.). D.A.S.는 Deutscher Automobil Schutz AG의 약자.

13) 위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참조.

- 2009. 5. 6. 금융위, 법률비용보험 전업사 국내 첫 허가 (금융위 제8차 정례회의)
- 2009. 11. 1. DAS법률비용보험(주), 첫 상품 판매 시작
- 2010. 4. 1. LIG손해보험이 ‘LIG법률비용보험’ 판매 시작 (그 후 판매 중단)
- 2013. 12. 9. 대한변협(회장 위철환), 2013년 제44차 상임이사회에서 법률보험제도 도입 연구위원회 설치를 위해 TF를 구성하기로 의결
- 2014. 1. 13. 대한변협, 2014년 제2차 상임이사회에서 법률보험 제도 도입 연구 TF (위원장 : 강행옥 부협회장) 구성
- 2014. 3. 10. 삼성화재해상보험(주)가 ‘무배당 삼성화재 비용보험 생활파트너’와 ‘무배당 삼성화재 비용보험 만사OK’라는 보험상품 판매 개시 (그 후 판매 중단)
- 2015. 1. 20. 대한변협, 「법률서비스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세미나 개최
- 2015. 1. 대한변협, 법률서비스보험특별위원회 구성(위원 14명)하였으나 집행부 변경으로 활동에 들어가지 못함
- 2015. 3. 16. DAS법률비용보험(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한국 보험시장에서 철수하기로 하고, 신규 상품 및 기존 계약에 대한 갱신을 중단하기로 결정
- 2016. 7. 25. 더 케이손해보험, (무)The-K 교직원 법률비용보험 판매 시작
- 2017. 6. 대한변협(회장 김현), 법률서비스보험특별위원회(위원장 : 최재호 부협회장)를 재구성(위원 30명)하고 본격적으로 활동 시작

#### IV. 법률서비스보험 활성화 방안

DAS법률비용보험(주)가 아시아 최초로 국내에 진출한 후 5년 만에 철수하기로 결정하고, LIG손해보험과 삼성화재도 단독상품으로 법률비용상품을 출시하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판매를 중단하는 등 법률서비스보험의 국내 시장 활성화에는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이에 그 원인을 분석해 보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음.

##### 1. 법률서비스보험에 대한 이해 제고

- 법률서비스보험의 운영에 있어서 관련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소비자, 그리고 변호사(또는 변호사단체)라고 할 수 있음.
- 변호사 또는 변호사단체의 역할 : 변호사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임. 의사가 의료보험을 잘 모른다면 의료보험제도가 활성화되는데 장애가 되는 것처럼, 변호사나 변호사단체가 법률서비스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면<sup>14)</sup> 역시 그 보험이 활성화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임은 자명함. 따라서 변호사 개개인이 법률서비스보험에 관한 이해가 무엇보다도 필요하고(교육,

14) 필자가 보기에, 법률서비스보험이 마치 변호사책임보험의 일종인 것으로 이해하고 그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하는 변호사들이 의외로 많은 것으로 보여 이 점을 극복하는 것이 우선 시급해 보임.

토론회, 홍보 등), 그러기 위해서는 변호사단체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 필요함.<sup>15)</sup> 미국 변호사회(ABA)가 맨 처음 법률서비스보험에 대해 반감을 가진 바 있었으나, 점차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1970년에 “선급법률서비스보험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둔 것이나, 1972년에는 모든 주 및 지방변호사회가 선급법률서비스에 관한 연구와 실험을 행할 것을 공식 권유하고, 1975년에 미국 선급법률서비스협회(API)를 설립하여 조사와 연구 기능을 맡기는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일본의 경우 변호사단체(일본변)가 1979년부터 법무보험제도에 대하여 연구하기 시작한 이래 변호사보험 실현을 위한 연구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함은 물론, 2000년에는 일본변이 직접 보험회사와 협정을 체결하여 변호사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권리보호보험’에 대하여 상표등록도 하고, 일본변 Legal Access Center(일본변 LAC)를 설립하여 변호사보험의 운영에 직접 개입하는 등 어느 나라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보험설계사와 보험회사 담당자에 대한 전문 교육의 필요성 : 다스법률비용보험은 국내에 진출하여 주로 홈쇼핑을 통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였는바, 이는 위 보험상품을 알리는데 어느 정도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원래 보험상품은 전자제품과는 달라서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이어서 홈쇼핑에 어울리지 않음.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수 교육 등을 통해 법률서비스보험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 소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방법이 될 것임. 또한 법률서비스보험에 대한 문의와 보험처리과정에서 담당자들이 위 보험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보험처리를 거부하는 경우,<sup>16)</sup> 이는 위 보험에 대한 인식을 떨어뜨리는 행위여서 소비자들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교육이 필요해 보임.

## 2. 다양한 보장의 필요성

- 소송사건은 물론이고 법률상담 등 소송 전, 소송 외 사건까지도 담보해야 : 다스법률비용보험이 우리나라에서 처리한 보상을 분석하면, 법률상담이나 내용증명발송, 조정·중재 등 소송 전 단계(Out of court)에서 종결된 비율이 96%, 소송단계(In-court)에 까지 진행되어 종결된 사건 비율이 4%라고 함.<sup>17)</sup> 그렇다면 소송사건에 대한 법률비용만 보장할 것이 아니라 소송 전 단계까지도 폭넓게 보장하는 보험상품이 필요하고 그래야 위 보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그것이 법률서비스보험의 존재이유이기도 함. 일상생활 중 사소한 일로 크지 않은 손해를 입은 경우(이웃집 개에 물려 다치거나 지나가던 자전거에 부딪쳐 다친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로 하여금 소송 전 단계에서 협상하고 배상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다면 법률서비스보험의

15) 변호사 개개인이 법률서비스보험에 관심을 갖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이고, 그렇다면 대한변협 등 변호사단체 집행부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리라 할 것임.

16) 인터넷 공간에서 법률서비스보험에 대한 후기를 찾아보면, “방송에서는 다 될 것처럼 홍보하더니 막상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려고 하였던니 약관 들먹이며 해주지 않았다”거나, “일상적인 사고가 나서 자문을 구하고 상담만 하려고 전화하였더니 이리저리 핑계만 대고 안 된다고 하더라.” “교통사고 일상용으로 가입하고 6개월 후 교통사고가 났는데, 보험회사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대여금을 받지 못해 보험처리하려고 하였더니 보험계약체결 전에 대여한 것이라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더라”는 등의 불만사항을 볼 수 있었음.

17) 김한준, “법률서비스보험 활성화 세미나”, 법률서비스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대한변호사협회(2015. 1. 20. 발표), 39.

존재가치가 높아질 것임.

- **가해자는 물론이고 피해자를 위한 담보까지** : 법적 분쟁이 생겨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마찬가지임. 그런데, 가해자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예컨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방어비용을 규정한 상법 제720조 제1항에 의해 변호사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음. 또한 우리나라에서 특약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법률서비스보험상품 대부분이 보험가입자(또는 피보험자)가 ‘가해자’인 경우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예컨대, AXA다이렉트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가입자가 타인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해 구속되거나 기소된 경우 보험가입자에게 변호사 보수, 형사합의 지원금 등의 법률비용을 지원하고, 현대하이카다이렉트보험도 보험가입자가 확정판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사고마다 최대 2,000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하고, 구속되거나 검찰공소가 제기된 경우 200만 원을 지급하며, 11대 중과실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3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법률비용을 지급함. 에르고다움다이렉트보험회사(‘비엔피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의 드림에르고다움다이렉트나 삼성화재의 ‘무배당삼성올라이프탑운전자보험’도 마찬가지임. 따라서 법률서비스보험이 효용성을 발휘하려면 ‘피해자’를 위한 담보항목을 폭넓게 두는 것이 필요할 것임. 피해자를 위한 보험상품이 확대되면 자동차사고를 당하더라도 변호사비용의 부담 때문에 권리주장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 것이고, 법률서비스보험의 필요성도 더욱 높아질 것임. 지적재산권보험은 좋은 예가 될 것임.

### 3. 분야별로 특화된 법률서비스보험 개발

- **지적재산권보험의 활약** :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소요되는 법률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 오래 전에 출시되었고, 정부에서도 보험료의 30~50%를 지원해 주어 정책적으로 보급에 힘쓰고 있음. 특허청은 수출 기업의 지재권 분쟁에 대한 국제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에서 지재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요되는 소송 및 대리인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인 「다년도(2년) 보장 지재권 소송보험」 출시하였고,<sup>18)</sup> 한국지식재산보호원(한국 지식재산보호협회)도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 공고를 통하여 보험가입자를 모집하는 등 지적재산권 보험은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분쟁에도 대비하여 많이 활성화 되어 있음.
- **교직원들을 위한 ‘교직원 법률비용보험’ 출시** : 더케이(The-K)손해보험은 2016. 7. 25. 교직원이 업무 중 사고나 교권침해로 민사·행정소송을 할 경우 관련 법률비용과 형사상 벌금을 지원하는 ‘무배당 The-K교직원법률비용보험’을 출시함. 특히 업계 최초로 교원 면직이나 감봉 처분에 대한 사전행정심판제도인 교원소청심사 청구 시 변호사 선임비를 보장하고 이후 청구가 기각되어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변호사비용에 인지대와 송달료까지 보장하는 보험상품임.
- **소방공무원에 대한 법률분쟁비용 지원 사업** : 국민안전처는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 교통사고 시 소방공무원의 형사적 법률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률비용지원 보험에 100% 가입을 완료하였다고 함. 그간 각종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사고손해율이

18) 특허청 보도자료, “다년도(2년) 보장 지재권 소송보험 출시”,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지원과(2017. 9. 13.), 1-3.

높은 차량은 법률비용지원 보험가입이 어려워 소방공무원에게는 부담이 되어왔다.<sup>19)</sup> 대한변협도 2017. 9. 8. 소방청과 ‘소방관 법률지원 업무협약식’을 갖고, 소방관이 공무 수행 중 발생한 각종 사고로 민·형사 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될 경우 소방관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관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원하고 있는바, 이러한 제도도 실질적으로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와 함께 또는 대체하여 모든 소방관에 대하여 법률서비스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법률서비스비용을 보험처리를 할 수 있다면 더 바람직할 것임.

- 위와 같이 특정 분야나 일정한 단체가 그 필요에 의해 법률서비스보험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것을 보면 다른 분야에 대하여도 활성화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을 것임.

#### 4. 정책적인 지원과 세제 혜택의 필요성

- 법률서비스보험의 보험료는 특정 단체의 근로자가 부담할 수도 있겠지만 사업주가 복리후생의 한 방편으로 기금을 출연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음. 이러한 경우 사업주의 출연금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준다면 위 보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사업주가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의 단체보험에 가입해 주고, 이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경우와 유사할 구조가 될 것임).
- 미국의 경우 1976년에 연방세법이 개정되어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한 선급법률서비스에 출연한 금액이 면세대상으로 포함시켜 위 보험의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음. 일반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하여도 정책적으로 세제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면 도움이 될 것임.

#### 5. 변호사의 질 확보 문제

- 국민들이 법률서비스보험에 관심을 갖고 이 보험상품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고(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무엇보다도 전문성과 능력이 있는 변호사에게 자신의 사건을 맡길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할 것임. 이는 보험처리를 하더라도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비로소 안심하고 법률서비스보험을 이용할 것이기 때문임.
- 그런 점에서 법률서비스보험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법률서비스 제공자인 변호사 영역에서 전문성과 성실성을 갖춘 변호사로 하여금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다할 것인데, 대한변협이 오래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전문변호사 등록 제도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아울러 변호사보수를 법정화하기 보다는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보험금은 사건의 난이도를 감안하여 그 범위 내에서 정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실력 있는 변호사가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임. 일본의 경우에 일변원이 변호사보수를 정하여 시행하다가 변호사회의 보수규정이 독점

19) 국민안전처 보도자료, “소방차 교통사고시 법률분쟁비용 전액 지원-법률비용 보험 100% 가입, 소방공무원의 교통사고처리 부담 해소”, 소방장비항공과 (2016. 5. 17.), 1-2.



금지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에 따라 보수규정은 폐지하였다고 함.<sup>20)</sup>

## 6. 특약상품보다는 전용상품

- 특약상품은 담보의 범위가 매우 좁아 법률서비스보험 전용상품이 바람직함.

## 7. 일반 종합보험사보다는 전업보험사

-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가해자이고, 피해자가 같은 보험회사의 법률서비스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종종 생길 텐데, 보험회사로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위하여 변호사비용을 담보해 주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
- 또한 법률서비스보험은 다른 보험상품과는 달리 생소하므로 종합보험사는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음.
- 따라서 다스법률비용보험과 같이 법률서비스보험 전업사가 등장하는 것이 위 보험 활성화에는 더 보탬이 될 것으로 보임.

# V.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보험상품의 소개와 이해

법률서비스(변호사비용 등)를 담보하는 보험상품으로는 이를 주된 담보내용으로 하는 전용상품이 있는 반면, 특약으로 일부만 보장하는 상품도 있다. 아래 소개하는 보험은 모두 법률서비스보험 전용 상품들이고, 지식재산권보험을 제외하고는 각 보험회사들이 법률서비스보험 전용상품으로 맨 처음 출시하여 판매한 보험상품들이다.

## 1. 법률비용보험 (DAS법률비용보험)

- 특징 :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 시는 물론 소송에 의하지 않는 분쟁의 해결 시와 법률상담서비스 시 소요되는 상담비용까지 보장!

20) 加納 小百合/ 佐瀬正俊, “現状の問題点-適正な弁護士報酬と紹介弁護士の質の確保の観点から”, 権利保護保険の課題と今後の展望, 自由と正義 64卷 7號(2013. 7.), 日本弁護士連合会, 34.

**[법률비용보험(2009.11.01 ~ 2010.03.31) 보통약관]**

제 5조(보상하는 손해 및 보장 내역)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특별약관에 기재된 보상하는 손해의 사유로서, 아래의 세 가지 경우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이하 “사고”라 합니다)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피보험자가 손해를 입은 사건

나. 법률상 또는 계약상 규정 및 의무를 실제로 위반하였거나 위반 하였다고 주장된 경우

다. 권리·의무관계의 변경이 발생하거나 그 발생이 임박한 것으로 예상되어 법률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의 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적절한 수단을 제공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아래의 보장내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소송을 통한 분쟁의 해결 시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

- 변호사 선임료
- 법정관련 비용(인지대, 송달료, 증인여비)
- 전문가 의견서 비용(의사, 감정인, 대학교수 등)
- 패소 시 법원에 의해 확정된 상대방 소송비용
- 회사가 심사하여 담보할 수 있는 공탁금에 대한 보증보험비용
- 통역료

2. 소송에 의하지 않는 분쟁의 해결 시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

- 승소 가능성의 조사 비용
- 법률 서비스 비용
- 조정 : 조정을 위해 필요한 법률전문가와 기타 전문가의 용역서비스와 그 비용
- 중재 : 중재에 따른 서비스 비용

3. 법률 상담 서비스 시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

- 변호사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제공하는 법률 상담
- 변호사가 전화로 제공하는 법률 상담
- 변호사가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법률 상담
- 변호사가 서면으로 제공하는 법률 상담

#### 4. 기타지원 서비스

- 법률정보
- 법률 서식 제공
- 보험사고와 관련한 중요한 서류 및 자료의 부본을 보관
- 24시간 긴급전화 접수 서비스

|       |   |
|-------|---|
| 보상한도  | 사고 당 5천만원, 법률 상담의 경우 연간 10회 사고, 소송의 경우 연간 1회 사고 한도  |
| 자기부담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보험자의 변호사 선임에 회사가 동의하는 경우 : 각 심급 별 10만원, 총 한도 30만원 (단, 법률 상담인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 없음)</li> <li>- 피보험자의 변호사 선임에 회사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 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률비용 총 금액의 10% (단, 법률상담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없음)</li> </ul> |

## 2. LIG법률비용보험 (LIG손해보험-변경된 상호 : KB손해보험)

- 특징 : 소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 보장

### [LIG법률비용보험(2010.04.01) 보통약관]

#### 제10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아래에서 정한 민사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 됨에 따라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을 제12조(법률비용보험금)와 제13조(보험금의 지급한도)에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회사가 보상하는 소송사건은 대법원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및 사건별 부호 문자에 관한 예규에서 아래와 같이 분류되는 소송사건에 한합니다.

| 심급구분 | 민사사건     | 사건별 부호 |
|------|----------|--------|
| 1심   | 민사1심합의사건 | 가합     |
|      | 민사1심단독사건 | 가단     |
|      | 민사소액사건   | 가소     |
| 항소심  | 민사항소사건   | 나      |
| 상고심  | 민사상고사건   | 다      |

- ② 제1항의 소송은 1심 소송, 그 1심 소송에 대한 항소심, 그 항소심에 대한 상고심 각각(이하 “심급별”이라 합니다.)을 말하며 이 계약에서 정한 보험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 ③ 제1항의 소송은 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위 제2항에 정한 각 심급별 하나의 소송에 한합니다.
- ④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이 갱신 계약인 경우 직전 계약의 보험기간 중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상품요약서-보장의 종류 및 보험금 지급사유]**

| 보장내용     |               | 보험금 지급사유   |
|----------|---------------|--|
| 기본<br>계약 | 법률비용          | 보험기간 중 발생한 민사사건으로 소송상 화해/조정 또는 판결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 인지세, 송달료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 선택<br>계약 | 방어비용          | 운전중 사고로 구속 또는 기소시 변호사 비용으로 보험가입금액 지급   |
|          | 교통사고처리<br>지원금 | 운전중 사망,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42일 이상 진단,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자배법 1/2/3급 부상)시 피보험자가 부담한 형사합의금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상품요약서-보험료산출예시]**

산출기준 : 보험기간 3년

| 보장구성                  | 보장금액     | 보험료(일시납) |
|-----------------------|----------|----------|
| 변호사비용<br>(자기부담금 10만원) | 15백만원 한도 | 557,030원 |
| 인지액, 송달료              | 5백원 한도   |          |
| 방어비용                  | 5백만원     |          |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3천만원 한도  |          |

**3. 삼성화재의 비용보험 만사OK보험/ 비용보험 생활파트너보험**

- 특징 : 소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 보장

**〈삼성화재의 비용보험 만사OK보험〉****[삼성화재 비용보험 만사OK(1403.1) (판매개시일 20140310) 보통약관]****제 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아래에 정한 제1호 및 제2호의 소송사건(대법원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및 사건별 부호문자에 관한 예규에서 아래와 같이 분류되는 소송사건에 한합니다)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을 제18조(법률비용보험금)와 제19조(보험금의 지급한도)에 정한 바에 따라 각각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민사소송

| 심급 구분 | 민사사건     | 사건별 부호 |
|-------|----------|--------|
| 1심    | 민사1심합의사건 | 가합     |
|       | 민사1심단독사건 | 가단     |
|       | 민사소액사건   | 가소     |
| 항소심   | 민사항소사건   | 나      |
| 상고심   | 민사상고사건   | 다      |

## 2. 행정소송

| 심급 구분 | 행정사건     | 사건별 부호 |
|-------|----------|--------|
| 1심    | 행정1심사건   | 구      |
|       | 행정1심합의사건 | 구합     |
|       | 행정1심단독사건 | 구단     |
| 항소심   | 행정항소사건   | 누      |
| 상고심   | 행정상고사건   | 두      |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소송은 1심 소송, 그 1심 소송에 대한 항소심, 그 항소심에 대한 상고심 각각(이하 「심급별」이라 합니다)을 말하며 이 계약에서 정한 보험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③ 제1항 제1호 소송은 각각 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위 제2항에서 정한 심급별 하나의 소송에 한합니다.

④ 제1항 제2호의 소송은 위 제2항에서 정한 심급별 하나의 소송에 한합니다.

**[삼성화재 비용보험 만사OK(1403.1)보험-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기본계약)]**

| 구분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기본계약 | 민사소송<br>법률비용손해 | <p>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 정한 민사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되었을 때</p> <p>※ 소송은 심급별을 말하며 보험기간에 제기되어야 함</p> <p>※ 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소송에 한함</p> | <p>· 변호사비용 : 1,500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10만원)</p> <p>· 인지액+송달료 : 500만원 한도</p> |
|      | 행정소송<br>법률비용손해 | <p>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 정한 행정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되었을 때</p> <p>※ 소송은 심급별을 말하며 보험기간에 제기되어야 함</p>                                   | <p>· 변호사비용 : 1,500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10만원)</p> <p>· 인지액+송달료 : 500만원 한도</p> |

**<비용보험 생활파트너보험>**

-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등 보험상품 내용이 위에서 살펴본 ‘삼성화재 비용보험 만사OK 보험’과 동일함.

**4. The-K 교직원 법률비용보험 (The-K손해보험)**

- 특징 : ‘교직원’이라는 특정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을 위한 보험인 점.

**[The-K 교직원 법률비용보험(201607) 보통약관]****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아래에서 정한 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을 제5조(법률비용보험금)와 제6조(보험금의 지급한도)에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회사가 보상하는 소송사건은 대법원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및 사건별 부호문자에 관한 예규에서 아래와 같이 분류되는 소송사건에 한합니다.



| 심급 구분 | 행정사건       | 사건별 부호 |
|-------|------------|--------|
| 1심    | 행정1심사건     | 구합     |
|       | 행정1심재정단독사건 | 구단     |
| 항소심   | 행정항소사건     | 누      |
| 상고심   | 행정상고사건     | 두      |

- ② 제1항의 소송은 1심 소송, 그 1심 소송에 대한 항소심, 그 항소심에 대한 상고심 각각(이하「심급별」이라 합니다)을 말하며 이 계약에서 정한 보험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 ③ 제1항의 소송은 제2항에서 정한 각 심급별 하나의 소송에 한합니다.

### 제5조(법률비용보험금)

- ① 회사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심급별로 아래 각 호에 대해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1. 【별표1】「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송목적 값에 따른 변호사 비용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 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별표2】「민사소송법 등 인지법」에서 정한 인지액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인지액
  3. 대법원이 정한 【별표3】「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송달료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송달료
- ② 위 제1항 제1호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며, 제1항에 각 호에 대해 종국판결 결과의 변동에 따라 미지급된 보험금을 추가 지급 또는 기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 제6조(보험금의 지급한도)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제5조(법률비용보험금)의 법률비용 보험금은 심급별로 아래와 같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구분   | 변호사비용                           | 인지액 + 송달료 |
|------|---------------------------------|-----------|
| 지급금액 | 1,500만원 한도<br>(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 500만원 한도  |





**[교원소청 변호사비용손해 특별약관]****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교원소청심사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교원소청심사를 보험기간 중에 청구하고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그 소청이 인용(처분의 취소·변경), 기각 등 심사 결정으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아래의 한도로 지급합니다.

| 구 분         | 지급금액                          |
|-------------|-------------------------------|
| 교원소청 변호사선임비 | 300만원 한도 (1사고당 10만원 자기부담금 공제) |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특별약관]****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아래에서 정한 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을 제3조(법률비용보험금)와 제4조(보험금의 지급한도)에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소송은 1심 소송, 그 1심 소송에 대한 항소심, 그 항소심에 대한 상고심

각각(이하「심급별」이라 합니다)을 말하며 이 계약에서 정한 보험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③ 제1항의 소송은 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위 제2항에 정한 각 심급별 하나의 소송에 한합니다.

**5. 지식재산권보험(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surance)**

- 특징 : 지식재산권 분야라고 하는 특화된 분야를 위한 전용보험인 점과 보험료에 관하여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있다는 점.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지원하는 지재권소송보험〉**

해외 진출(예정) 중소기업의 지재권 분쟁과 관련한 경제적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기업경영을 위하여 지재권 소송보험의 가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 지재권 소송보험 보험료의 30~50%를 정부에서 지원
- 지식재산권 분쟁발생 시 소요되는 법률비용을 보장



## [소송보험 지원사업 주용내용-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의 2017.8.1.자 지원사업 공고문]

| 구 분  | 보 험 명                   | 신 청 대 상                           | 보 장 지 역                   | 보 장 기 간                     | 보 장 내 용               | 보 험 료            |
|------|-------------------------|-----------------------------------|---------------------------|-----------------------------|-----------------------|------------------|
| 단체보험 | 수출안심<br>지재권<br>단체보험     | 중소기업                              | 아시아·오세아니아<br>(중국포함, 국내제외) | 보험<br>가입일로부터<br>1년<br>(소멸성) | 소제기,<br>피소대응          | 380만원            |
|      | 북미·유럽<br>지재권 안심<br>단체보험 |                                   | 북미·유럽<br>(영국포함)           |                             | 피소대응                  | 1,350만원          |
| 특화보험 | 농식품<br>상표·디자인<br>안심보험   | 농식품 수출<br>중소기업<br>(프랜차이즈<br>업종포함) | 아시아·중동<br>(중국포함, 국내제외)    |                             | 소제기,<br>피소대응          | 300만원            |
| 일반보험 | 글로벌<br>지재권 안심<br>종합보험   | 중소·중견기업                           | 전 세계                      |                             | 소제기,<br>권리보호,<br>피소대응 | 기업별<br>보험료<br>산정 |

### [북미·유럽 지재권 안심 단체보험]

| 세부구분   | 지원내용  |      |      |
|--|---|------|------|
| <b>북미·유럽<br/>지재권 안심<br/>단체보험</b><br><br>북미·유럽(영국포함)<br>지역 지재권 분쟁<br>피해를 보장하기 위한<br>수출전략 단체보험 | <b>보험료</b><br>1,350만원(정부지원 50%)<br><b>신청자격</b><br>국내 중소기업<br><b>보장내역</b><br>지재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관련 분쟁 법률비용 보상<br><b>보장기간</b><br>보험가입일로부터 1년(소멸성)<br><b>담보내용<br/>및<br/>보상한도액</b><br><table border="1"> <tr> <td>피소대응</td> <td>5천만원</td> </tr> </table> <b>보장지역</b><br>북미·유럽지역(영국포함)<br><b>공동부담비율</b><br>피소대응 20% | 피소대응 | 5천만원 |
| 피소대응   | 5천만원  |      |      |

\* 보장내용 : 경고장, 소송수수료, 대리인 비용, 감정비용, 기타 소송 등과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산정 가능한 비용  
 \* 보장제외 : 행정조치, 세관비용, 행정심판비용, 손해배상금(판결금액, 화해금), 실시료, 부당이득 반환금, 벌금, 과료, 과태료, 소송상대가 지급해야 하는 비용

### [글로벌 지재권 안심 종합보험]

일반  
보험

글로벌  
지재권  
안심 종합보험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전세계 지재권 분쟁  
피해를 보장하기 위한  
일반보험

세부구분

|                    |
|--------------------|
| 보험료                |
| 신청자격               |
| 보장내역               |
| 보장기간               |
| 담보내용<br>및<br>보상한도액 |
| 보장지역               |
| 공동부담비율             |

지원내용

|   |
|---|
| 선택사항에 따라 상이함(정부지원 중소 50%, 중견 30%)               |
| 국내 중소·중견기업                                      |
| 지재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관련 분쟁 법률비용 보상             |
|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소멸성)                                |
| 소송제기, 권리보호, 피소대응(선택가능)<br>가입 시 설정금액 연간 최대 5억 한도 |
| 전 세계(국내포함) 중 선택가능                               |
| 10~40% 차등적용                                     |

- \* 보장내용 : 경고장, 소송수수료, 대리인 비용, 감정비용, 기타 소송 세관조치, 행정단속 등과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산정 가능한 비용
- \* 보장제외 : 행정심판비용, 손해배상금(판결금액, 화해금), 실시료, 부당이득 반환금, 벌금, 과료, 과태료, 소송상대가 지급해야 하는 비용

## VI. 결론

- 부상이나 질병이 생기면 그 치료는 의료전문가인 의사에게 맡겨야 하는 것처럼, 법적 분쟁이 생기면 그 해결은 법률전문가에게 맡김으로써 불필요한 분쟁 확대나 장기간 분쟁에 휘말리는 부작용을 줄일 필요가 있음. 경미하더라도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의사로 하여금 치료하도록 해야지 의료전문가가 아닌 사람의 조언에 따라 상처 부위에 된장을 바른다면 이는 결코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법적분쟁도 법률전문가로 하여금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법치주의에도 부합하고 경제적인 해결방법이라는 취지임. 법률서비스보험이 활성화되어 이러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면 사회적·법적인 사회보장제도로서 바람직하고, 의료보험과 함께 우리 사회의 건강과 법적 분쟁을 담보하는 양대 사회보장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대법원이 2017. 9. 18. 발간한 ‘2017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6년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74만 7,513건으로 이 중 **민사사건은 473만 5,443건**으로 소송사건의 70.2%를 차지한다고 함.<sup>21)</sup> 소송사건이 이렇게 많고, 법적 분쟁 중 소송으로 해결되는 비율이 4% 정도에 불과하다면 (다스법률비용보험의 조사결과), 소송 전, 소송 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분쟁이 소송사건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인데, 이러한 소송 외적인 분쟁에 대하여도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고, 법률서비스보험이 활성화된다면 그러한 소송 외적 분쟁해결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어서 위 보험의 활성화는 필요하다할 것임.

21) 법원행정처, 2017 사법연감(2017), 552., 한편 2015년도 소송사건은 6,500,844건(민사사건 4,610,899건), 2016년도 소송사건은 6,361,785건(민사사건 4,445,269건)이라고 함.

## 참 고 자 료

### [국내자료]

- 국민안전처 보도자료, “소방차 교통사고시 법률분쟁비용 전액 지원-법률비용 보험 100% 가입, 소방 공무원의 교통사고처리 부담 해소”, 소방장비항공과 (2016. 5. 17.)
- 권영수, “법률비용보험의 운영현황 및 활성화에 따라 예상되는 위험에 대한 대책”, 조사연구 Review 제19호(2007. 3.)
- 권효상, “법무보험에 관한 연구-법제운용과 정착가능성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2012),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가칭) D.A.S. 법률비용보험(주)의 보험업 예비허가”,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손해보험서비스국(2008. 9. 26.)
- 김은경, “법률서비스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법률서비스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대한변호사협회(2015. 1. 20. 발표)
- 김은경, “법무비용보험의 법적 구조의 개관-독일 입법례를 중심으로-”, 법제연구 제44호(2013)
- 김한준, “법률서비스보험 활성화 세미나”, 법률서비스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대한변호사협회(2015. 1. 20. 발표)
- 박기억, “법률서비스보험 활성화를 위한 보험회사와 변호사단체의 역할”, 법률서비스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대한변호사협회(2015. 1. 20. 발표)
- 법원행정처, 2007 사법연감(2017)
- 오수근, “법무비용보험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1993)
- 유주선, “권리보호보험(법률서비스보험)에 대한 이해와 활성화 방안”, 법률서비스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대한변호사협회(2015. 1. 20. 발표)
- 유주선·최병규·김은경·남원식, “변호사보험제도의 발전방향”,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보고서(2014)
- 이봉림, “법률비용보험의 국내시장 활성화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제20권 제2호(2008)
- 이상돈, “사법적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법률서비스의 개선방안”, 중앙법학 제4권 제1호(2002)
- 장재옥, “미국에서의 소송비용부담과 법률서비스 보험”, 법학논문집 제23권 제2호(1999),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 장재옥, “법률서비스보험 연구 -독일에서의 권리보호보험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22권 제1호 (1997),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 지수현, “법률비용보험의 개황과 활성화 방안”, 손해보험지 통권 제396호(2001. 11)

최준선, “권리보호보험 연구”, 기업환경의 변화와 상사법(손주찬교수 고회기념논문집)(1993)

최준선, “법무비용보험제도의 도입의 필요성”, 보험조사월보 제18권 10호(1995), 보험감독원

특허청 보도자료, “다년도(2년) 보장 지재권 소송보험 출시”,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지원과(2017. 9. 13.)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공고문, “2017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 공고(제7차)”(2017. 8. 1.)

## [일본자료]

加納 小百合/ 佐瀬正俊, “現状の問題点-適正な弁護士報酬と紹介弁護士の質の確保の観点から”, 権利保護保険の課題と今後の展望, 自由と正義 64卷 7號(2013. 7.), 日本弁護士連合会

小島武司, “司法改革と権利保護保険”, 自由と正義 52卷 12號 (2001. 12.), 日本弁護士連合会

小山昭雄, 保険業界から見た権利保護保険の位置付けと今後の展望, 自由と正義 52卷 12號 (2001), 日本弁護士連合会

辻千晶, “訴訟費用と権利保護保険-ドイツ外國法事務弁護士報告(二)”, ジュリスト 997號 (1992. 3.)

鈴木和憲, “イギリスの訴訟費用保険”, 権利保護保険の課題と今後の展望, 自由と正義 64卷 7號(2013. 7.), 日本弁護士連合会

應本昌樹, “ドイツにおける権利保護保険”, 権利保護保険の課題と今後の展望, 自由と正義 64卷 7號 (2013. 7.), 日本弁護士連合会

伊藤明彦, “アメリカにおける権利保護保険”, 権利保護保険の課題と今後の展望, 自由と正義 64卷 7號 (2013. 7.), 日本弁護士連合会

提淳一, 権利保護保険(弁護士保険), (2006) 新・裁判實務大系, 19: 保険關係訴訟法, 青林書院(2006)

佐瀬 正俊, “権利保護保険の歴史とその將來像”, 権利保護保険の課題と今後の展望, 自由と正義 64卷 7號(2013. 7.), 日本弁護士連合会

佐瀬 正俊, “海外調査における總括”, 権利保護保険の課題と今後の展望, 自由と正義 64卷 7號(2013. 7.), 日本弁護士連合会

秋山清人, “権利保護保険から弁護士業務改革を考える”, 自由と正義 52卷 12號 (2001. 12.), 日本弁護士連合会

秋山清人, “権利保護保険と少額事件”, 自由と正義 49卷 5號 (1998. 5.), 日本弁護士連合会 , 52

秋山清人, “弁護士保険(権利保護保険)搖籃期”, 権利實效化のための法政策と司法改革: 小島武司先生古稀祝賀<續> (2009)

秋山清人, 動き出す弁護士會の権利保護保険制度(リ-ガル・アクセス・システム), 自由と正義 51卷 9號 (2000), 日本弁護士連合会

## 별첨자료

[별첨1] DAS법률비용보험 상품요약서 (2009.11.01 ~ 2010.03.31)

[별첨2] DAS법률비용보험 보험약관 (2009.11.01 ~ 2010.03.31)

[별첨3] LIG법률비용보험 상품요약서 (2010.04.01)

[별첨4] LIG법률비용보험 보험약관 (2010.04.01)

[별첨5] 무배당 삼성화재 비용보험 만사OK 상품요약서 및 보험약관 (2014.03.10)

[별첨6] (무)The-K 교직원 법률비용보험 상품요약서 (2016.07.25 ~ 2016.12.31)

[별첨7] (무)The-K 교직원 법률비용보험 보험약관 (2016.07.25 ~ 2016.12.31)



# 법률서비스보험 활성화 방안 토론회

**일시** 2017년 11월 1일 (수) 오후 2시

**장소** 대한변호사협회 14층 대강당



대한변호사협회